

‘동네병원 휴진’ 환자 큰 불편

광주·전남 1,300여명 上京... 입원·응급환자만 진료

약국·보건소 밤까지 ‘복직’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맞서 광주·전남지역 동네의원들이 21일 집단 휴진을 하는 바람에 환자들의 크고 작은 불편이 잇따랐다.

광주시와 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리는 ‘의료법 개악저지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중에 버스편으로 상경한 의사들은 시 의사회 400여명, 치과의사회 200여명, 한의사회 150여명 등 모두 750명에 달한다. 전남에서도 의사 500여명이 이날 하루 진료를 하지 않고 상경했다.

이날 오후에도 일부 의사들이 개별 상경해 휴진에 동참하면서 광주시 북구의 경우 동네 의원 60%가량이 문을 닫는 등 광주·전남 곳곳의 동네의원 휴진에 환자들의 불편을 샀다. 병원들은 의사회 임원 등 일부 의사들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해 진료차질을 막기도 했으나, 일부는 문을 닫은 채 입원환자와 응급환자만을 진료해 외래환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양산동 Y정형외과를 찾은 정모(여·82·광주시 북구 양산동)씨는 “지나중에 넘어져 허리와 어깨 물리치료 받으러 걸어왔는데 허탕치고 돌아간다”며 “이틀 전에 왔을 때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북구보건소를 찾은 이모(49·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일곡동 일대 동네 의원은 전부 휴진”이라며 “몇 군데는 놔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남구 J병원 외래환자 이모씨(25·여)는 “파스를 붙인 곳에 갑자기 피

부 트러블이 생겨 병원을 찾았는데 셔터 문이 내려져 있어서 진료는 포기하고 약국에서 간단한 치료제만 구입했다”고 불평했다.

남구 C치과를 찾은 김모(여·52·광주시 남구 진월동)는 “이가 시러서 병원에 갔는데 문이 닫혀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려고 와야 했다”고 말했다.

문답은 동네병원이 늘면서 정상진료하는 병의원과 보건소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북구 H의원과 동구 D내과 등은 인근 10여개 의원이 휴진하는 바람에 외래환자 수가 20~30% 가량 늘었다.

광주·전남지역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이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 통제를 사들고 와야 했다”고 말했다.

문답은 동네병원이 늘면서 정상진료하는 병의원과 보건소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북구 H의원과 동구 D내과 등은 인근 10여개 의원이 휴진하는 바람에 외래환자 수가 20~30% 가량 늘었다.

광주·전남지역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이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 통제를 사들고 와야 했다”고 말했다.

문답은 동네병원이 늘면서 정상진료하는 병의원과 보건소에는 환자들의



“문 닫았어요” 있다.

21일 광주·전남 의사 1천300여 명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맞서 집단 휴진을 한 가운데, 광주시 북구 운암동 J한의원을 찾은 50대 환자가 굳게 닫힌 셔터 사이로 휴진 안내문을 읽고 있다.

시위 중 軍 철조망 파손 배상 판결

광주지법, “패트리어트 반대 공대위 3,440만원 물어야”

법원이 시위 도중 국가 기물을 훼손한 시민단체에게 수 천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국가가 원고로 직접 나서 집회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최초 판결이어서 향후 집회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이명철 판사는 21일 국가가 ‘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이

하 공대위)와 공대위 대표 김모(56)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4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 목사에 대해서는 “집회 주최자로 볼 수 없고, 파손행위에 가담한 직접적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소(訴)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주최자는 참가자들이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가했고 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집회의 성격상 폭행이나 손괴 등 불상사 발생 가능성이 충분했고, 또 질서유지인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할 충분

한 시간과 인력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런 노력에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 11월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된 반(反)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시민·사회단체의 대응도 주목된다.

한편 공대위와 김 목사는 2005년 5월 15일 광주공광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7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를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집회를 갖는 과정에서 공군기지 울타린 길이 597m의 외부 철조망과 300m 내부 철조망 중 일부를 파손했고 이에 대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했다.

성공적인 투자

1588-1587
0518-1500

가장 높은 수익률에 투자하세요!

노인연금
379,000
399,000
699,000
379,000
319,000
359,000
3,390,000
3,090,000

투자 성공의 비결

159,000
179,000
219,000
239,000
259,000
279,000
299,000
319,000
339,000
359,000
379,000
399,000
419,000
439,000
459,000
479,000
499,000
519,000
539,000
559,000
579,000
599,000

투자 성공의 비결

159,000
179,000
219,000
239,000
259,000
279,000
299,000
319,000
339,000
359,000
379,000
399,000
419,000
439,000
459,000
479,000
499,000
519,000
539,000
559,000
579,000
599,000

투자 성공의 비결

159,000
179,000
219,000
239,000
259,000
279,000
299,000
319,000
339,000
359,000
379,000
399,000
419,000
439,000
459,000
479,000
499,000
519,000
539,000
559,000
579,000
599,000

인권위 “위장메일 발송 인권침해”

사이버수사 지침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경찰이 피의자의 위치 추적을 위해 타인 이름으로 위장 메일을 발송하거나 가족을 근접거리에서 미행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경찰청장 등에게 사이버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전 위원장이 “2004년 3월 경찰이 전공노 간부들을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과잉 수사했다”고 진정된 사건을 조사할 결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전공노 간부 6명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의 이메일 계정에 가족이나 또 다른 전공노 간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장의 이름을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했다.

전공노 간부들이 이메일을 열어보면 경찰이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법이기에 과잉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명의를 사칭 당한 사람·기관의 인권과 공신력이 훼손되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7083) 김장두



5명 탄 어선 실종

신안 비금도 해상서...해경 수색작업

선원 5명이 탄 영광선적 어선이 4일째 연락이 두절돼 해경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2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20분께 영광군 낙월 선적 12t급 연안저망 '제2동상호'(선장·이동욱·30)가 신안군 비금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4일째 소식이 끊겼다.

이 어선은 지난 12일 오후 4시10분 진도 서방향으로 출발, 서거차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마친 뒤 신안 비금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선주 전모씨(53)는 “신안 칠발도 등대 해상에서

비금도로 이동 중”이라는 선장의 무전 받은 후 지금까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경은 경비정 5척·구난헬기 1대·수색인원 100여 명을 사고해역에 급파, 수색작업을 펴고 있으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실패해 실종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종자=▲선장 : 이동욱 ▲선원 : 한국남(45), 김준현(29), 윤길남(36), 송호야(38)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광주광역시 중구...
수원신도시 피오레
062-367-9000

형제 주유소 강도 검거

광주 서부경찰은 21일 서구 쌍촌동 모 주유소에 침입, 주유상품권 등 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이모(30)씨 형제 등 3명을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살 어린이 행불 총장 등 13명 고발

여수경찰, 납치 가능성 수사

5살 여자 어린이가 집 근처에서 행방불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이모(여·5)양이 여수시 교동 자신의 집 인근에서 사라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 양은 검은 생머리를 길게 기르고 분홍색 상의에 청치마를 입고 검은 색 부츠를 신고 있었으며,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없는 것으로 미뤄 단순 미야 사건으로 보고 있으나, 납치 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총장 등 13명 고발

대불대학교수협 “등록금 횡령”

영암 대불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1일 이순현 현 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13명을 광주지법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전·현직 경영진들이 학생들의 등록금(교비)을 학교법인 Y 학원 등에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 임대 수익을 올리는 등 199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80여 만원을 법에 규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을 위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전체 횡령액의 25% 정도인 140여 만원을 보전 회수 조치하고 나머지는 불문에 부쳤다”고 말했다.

연예인 66명 ‘스타 주식시장’ 소송

○-문근영·권상우·김해수·배용준·전지현 등 인기 영화 배우와 탤런트 66명이 사이버 증권시장을 운영하는 엔스다큐를 상대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

○-이들은 “사이버 모의 증권시장에서 원고들의 초상과 성명이 주식거래 대상이 되면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초상·성명을 사용하지 말 것과 1인당 1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엔스다큐 홈페이지(www.ensdaq.com) 회원들에게 미리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나눠주고 모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연예인들을 사고팔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연합뉴스